

비상경제본부 회의 결

경제 관계장관회의

26-8-4

(공개)

#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

2026. 4. 3.

관 계 기 관 합 동

#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 (요약)

## 1 추진배경 및 경과

-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지침 등을 통해 기업·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각종 부담 야기

\* 검사·인증, 등록·신고, 지원사업 등 수탁사무와 조달·입찰 등 자체사무 수행

\*\* '19년~'21년, 4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정부가 협업을 하여 공공기관 규제 약 8백여건 기 정비

- 국정기조에 맞춰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 기업규제 개선 노력 추진\*

\* 우선 각 공공기관이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중기 옴부즈만, 재경부 공동으로 우수과제 선정(49개 기관, 104건) →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가 참여 유도

## 2 추진결과

- ◇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관련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 총 251건(109개 기관) 합리화

### 추진 목표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로 기업현장 활력제고

### 4대 중점 추진과제

#### 1.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44건)

- 기관 고유사업, 법정 수탁사무입지지원 등 관련 진입제한 요건 합리화

#### 2.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

- 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개발 수수료 경감, 중소기업 비용지원 확대

#### 3.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123건)

- 계약조건 공정화, 등록·입찰·평가·납품·검수 등 조달 단계별 부담 개선

#### 4.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45건)

- 공공기관 승인 절차 등에 있어 서류제출 부담 경감 및 자율강화

### 3 주요 개선과제

#### ①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 ⇒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시 방출구 위치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하여 기업부담 경감 한국가스안전공사
- \* 액화수소 방출가스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확산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수소 충전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 중이며 거리기준 특례는 버스 차고지에 한정
- ⇒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을 삭제하여 기업 재기회 확대 한국남부발전 등 6곳
- \* 공급업체가 특정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②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 ⇒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한국환경공단
- ⇒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 개선 등 인공지능 전환비용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곳

#### ③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 ⇒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연동제 확산 (주)에스알 등 7곳
- ⇒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 한국가스공사 등 6곳

#### ④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 ⇒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기간 단축(정산마감일 + 10일 이후 → 정산마감일 + 2일 이후) (주)공영홈쇼핑 등 2곳
-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출자지분을 변경할 경우, 사전승인 대상 요건을 완화(현행 5% 이상 → 10% 이상) 부산항만공사

### 4 향후 추진계획

- 개선과제 이행점검('26.하) 및 우수 개선사례 확산·전파와 함께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기업성장응답센터\*) 확대

\* 공공기관별 기업 규제애로 해소 목적 전담창구(온·오프라인)로 144개 설치·운영중

# 순 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	1
II. 추진결과 .....	2
III. 주요 개선과제 .....	3
1.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	3
2.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	5
3.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	7
4.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	9
IV. 향후 추진계획 .....	11
붙임. 숨은규제 합리화 세부내용 .....	12

## I. 추진배경 및 경과

### □ (배경)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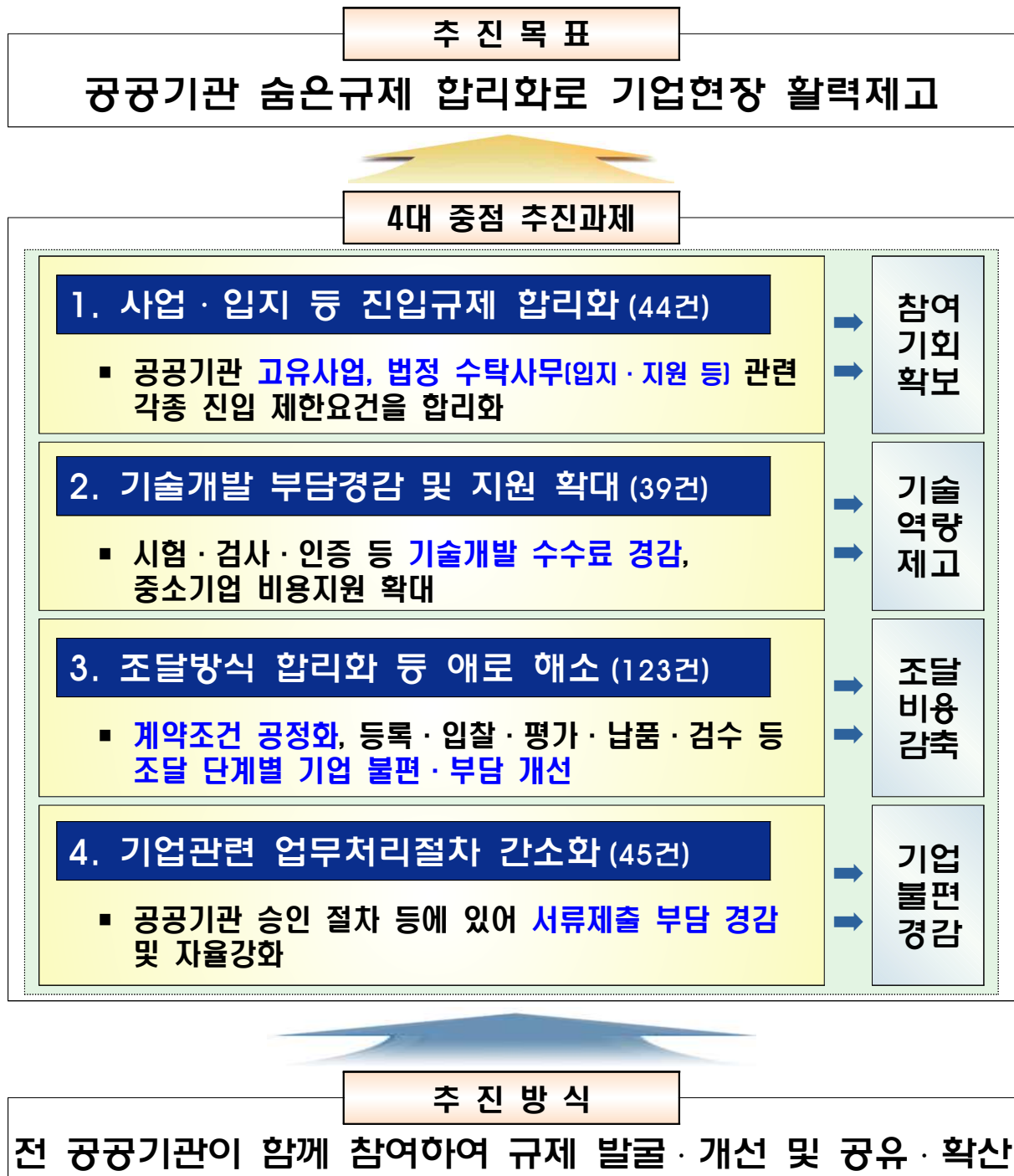
-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지침 등을 통해 기업·국민에게 조달·인증·평가·지원 등\* 관련,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
  - \* 검사·인증, 등록·신고, 지원사업 등 수탁사무와 조달·입찰 등 자체사무
  - \*\*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숨은 규제 또는 유사행정규제 등으로 지칭
-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
  - \*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규제애로 해소

### □ (경과) 공공기관·정부·민간 협업으로 공공기관 규제 발굴·개선

- '19년~'21년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정부가 협업을 하여 공공기관 규제 약 8백여건을 기 정비
  - 또한 '20년부터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읍부즈만 및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 구축·운영 중(144개 기관)
    - \* 공공기관별 기업 규제애로 해소 목적 전담창구(온·오프라인) : 혁신성장 저해규제, 지역 현장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등 발굴·개선
-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에 맞춰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 기업규제 개선 노력 추진
  - 우선 각 기관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읍부즈만,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규제 합리화 방안 수립
  - 아울러 규제 합리화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타 기관에 확대 적용

## II. 추진결과

- ◇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관련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 총 104건 합리화
  - 우수 추진과제들을 전체 공공기관에 공유하여 추가 참여 유도 ⇒ 총 109개 공공기관이 총 251건의 규제애로 정비



### Ⅲ. 주요 개선과제

#### 1.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 ①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입지기준 완화 한국가스안전공사

- (현황) 액화수소 충전시설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일반 충전시설보다 넓은 사업부지\*를 요구하여 부지 확보에 애로가 상당
  - \* 액화수소 방출가스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확산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 중
  - 또한 버스 차고지는 차고지 경계를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인정\*받아 부지 확보가 용이하나, 화물차 차고지는 예외 미인정
    - \* 액화수소 충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 간 최소 10m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하나 버스 차고지와 바다·호수·하천·도로 인접 사업소 등에 대해 예외 적용
- (개선) ①방출구 위치 제한규제를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②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도 완화(기후부)하여 설치부담 경감
  - \* ① 액화수소도 기체 형태로 방출됨으로 기체수소와 다른 규제를 적용할 근거 없음
  - ② 버스 차고지 이외 화물차 등 상용차 차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소 경계규제 완화

##### ②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 기회 확대 한국남부발전 등 6개 기관

- \* 특정 공급자(공급업체)가 특정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서류심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선정(유자격자 명부 등록 3년)
- (현황) 발전 기자재 부품 공급업체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이력'에 감점\*을 최대 5년간 부여하여 재도전 기업의 진입부담 상당
  - \* '부도/화의' 기간에 따라 -5점(1년 미만)에서 -1점(3년 이상 5년미만)까지 감점 부여
- (개선)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하여 원활한 재기회 마련 및 과도한 기업경영 부담 경감
  - \* 기업의 재정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등의 자료로 판단 가능

③ **고속도로변 주택사업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한국도로공사

- (현황) 도로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코자 하나, 기존 태양광 발전 사업지 물량이 한정되고 방음시설 활용도 제한
  - (개선) 발전사업자가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 방음판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참여기회 확대
- \* 고속도로 인근 주택사업 시행시 사업자 필요에 의해서 고속도로변에 설치를 요하는 방음시설

④ **기자재공급 유자격자 등록 심사·관리 합리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현황) 등록 기술분야 심사시 ①비핵심 점검항목\* 기준 미달에 대해 부적격 처리를 하고, 유자격자의 취소사유 발생시 ②사유 경중과 관계없이 2년간 재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기업부담
- \* 작업장 청결도, 하도급 관리대장 운영 등

[현장사례] 중소기업 D사는 기자재공급 유자격자 심사시 설계실적, 설계능력 평가, 설계인력 적정성 부문에서는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하도급 관리대장 미흡 등을 이유로 불합격되었다고 불만을 토로, 기자재 공급과 관련한 중요항목을 보다 우선시해야 하지 않냐고 의견제시

- (개선) 핵심 점검항목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유자격 등록 취소사유별로 재등록 제한기한 차등 설정\*\*하여 합리성 제고
- \* 설계실적·능력·인력 적정성 등을 주로 평가하고 핵심 점검항목 기준점수 미달시 부적격
- \*\* 허위서류제출 등 중대사유는 2년, 시정조치 불이행 등 경미한 사유는 6월~1년 제한

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개선**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2개 기관

- (현황) 자체등급분류\*를 이용코자 하나 관련 사업자 지정시 법적근거 없이 '수상내역·사업실적(가점 3점)' 등을 평가하여 소기업 진입애로
- \* 일정 자격을 갖춘 OTT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없이 서비스 제공가능
- (개선) 기업 사업실적·수상내역 등을 심사하는 기업 현황 항목에서 가점제(3점)를 삭제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및 역차별 애로 해소

## 2.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 ① 물기업 시험·검사 수수료 경감대상 확대 한국환경공단

- (현황)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한해 수수료를 경감\*, 연구개발 분석 감소\*\* 및 기업간 차별
  -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먹는물 분석 70%, 먹는물 이외 분석 50%, (공익목적 지원사업 선정기업) 면제, (물산업 기술발전 업무협약 단체) 30%
  - \*\* 코로나19 특별감면제(무상) 종료('23.5월) 후 분석건수 대폭 감소('23년 8,319 → '24년 6,271건)
- (개선) 수수료 감면적용 대상을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심에서 국내 물산업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감면)으로 확대
  - \* 입주기업 이외 기업의 시험·검사건수 연간 3,800건(예상) → 53백만원 경감 추정

### ② 중소기업 AI 전환 비용지원 자체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

- (현황) 중소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해 AI 전환 및 업무자동화가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AI 활용에 대한 지원 요청도 증대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3%가 업무자동화 지원을 희망했으며, 이 중 45%는 AI 활용에 지원을 희망('25.8월)
- (개선)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업무자동화, 비즈니스 생산성 개선 등 중소기업이 수요로 하는 인공지능 전환 소요비용 지원
  - \* 민간자율 기획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한 인공지능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완료 후 소요비용 100% 환급(최소 3개사 이상 최대 5천만원 지원)

### ③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확대 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

- (현황)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 제도가 있으나 수수료 부담 등으로 제도 활용 미흡
  - \*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
- (개선)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존 및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기술임치 수수료 전액 지원(최대 30만원) 대상 확대

#### ④ 실증기업 K-테스트베드 비용부담 감축 인천국제공항공사

- (현황) 테스트베드 규정 상 '설치 관련 부대비용 전액 실증기업 부담' 조항이 있어, 실증을 원하는 기업들의 금전적인 부담\* 가중
  - \* 실증과정 중 공항 내 장소 제공 등 인프라 제공을 제외한 업체 기술/제품 설치, 철거 등 각종 부대비용은 기업에서 전액 부담
- (개선) '중소기업 종합지원 제도' 내 기술 관련 테스트베드 지원 항목 신설 추진(1건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⑤ 중소기업 직접투자형 공동연구개발 제도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

- (현황) 현재 운용되고 있는 R&D 지원사업\*에서는 연구개발 후 공공기관 구매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 현재 정부 발주 R&D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니즈 충족이 어렵거나, 사업화 불확실성 존재
- (개선)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를 구매로 연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직접 투자 및 공동연구과제 추진 제도 마련
  - \* 긴급 기술개발 필요과제 발굴 및 연계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연구 과제 추진, 공동연구(직접투자)에 대한 세부절차 및 표준협약서 마련 등

### 3.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 ① 중소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지원 주식회사 에스알 등 7개 기관

- (현황)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경험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약정체결 업무에 어려움 호소

[현장사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금속 가공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기업 A사는 계약 체결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핵심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되지 않아 폭등한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함

- (개선) 기체결 계약 중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미도입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신규 대상업체 발굴·지원

②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을 인하**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

- (현황) 물품 제조·구매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3%)보다 높은 5%로 규정하여 기업부담 야기 및 형평성 애로  
\* 국가계약법령은 관련 하자보증금률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자체운용
- (개선) 조달청 기준과 같이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인하(연간 21억원 비용절감 예산)

③ **급식위탁용역 계약방식 합리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개 기관

- (현황) 급식위탁용역 특성상\* 발주기관의 수요 변동에 따라 수탁업체가 원재료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추가비용 부담 빈번  
\* 실 수요에 따른 비용 정산 방식의 용역 계약(세부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계약으로 정함)으로 식수 변경, 수량 조정 관련 조건이 위탁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

[현장사례] A기관은 단체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식수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수탁업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사전 준비한 다수의 식재료가 폐기되고,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서에 따라 수탁업체가 모두 부담

- (개선) '실 수요 수량 사전통지'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확히 반영\* 시키고 급식 수탁업체에게 각종 부대경비 전가를 방지\*\*  
\* 또한 급식 식수량 사전통지를 위하여 수탁업체-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 실시  
\*\* 급식수탁업체의 시설 사용료(주방·식당 임대료 등) 및 운영 경비(상·하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비용은 위탁자(공공기관)가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④ **조달입찰 인지세 납부부담 경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6개 기관

- (현황) 인지세를 공동납부를 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약업체가 인지세를 전액 납부
- (개선) 기업이 전액부담하던 인지세를 기관과 공동납부(5:5)하고, 공동납부하던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 전액 납부로 기업 부담 완화

⑤ **조달기업 대금 청구절차 간소화** 국가철도공단

- (현황) 기관 전자조달시스템 대금 청구시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자료 첨부 등 절차가 번거로워 행정불편 과다

- (개선)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목록을 자동으로 불러온 후(스크래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대금 청구서에 반영\*\*

\*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 연간 6천여건의 계약 대금 청구서 작성 시 약 2,750시간 절감(1건당 5분 소요 가정)

## 6 연구용역 제안서평가 실적 인정범위 확대 국가철도공단

- (현황)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시 '철도 관련 기술 분야'로 한정하여 경력·실적을 인정 → 기존 참여기업 이외 기업은 현실적으로 조달진입 애로
- (개선) 철도 분야 이외 도로, 항만, 공항 등 유사분야의 조사·분석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용역 실적 등도 실적에 포함

## 7 제작 영상산출물 납품방식 개선 한국발명진흥회 등 6개 기관

- (현황) 영상물 제작의뢰시 최종 산출물을 외장하드(백업용 포함) 등 비전자 저장매체로 납품토록 하여 기업 불편·부담\*
- \* 기업 담당자 행정부담 증대, 산출물 수정·보완시 추가 비용·불편 가중 등
- (개선) 영상콘텐츠 등 최종 산출물을 클라우드 시스템 또는 전자 문서 시스템(이메일)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8 방송통신기자재 등 공사현장 반입절차 간소화 국가철도공단

- (현황)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관련 기기\*에 대해 공사·자재별로 공인기관시험을 받도록 하여 잦은 시험 및 비용 과다 등 애로
-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 건당 시험비용(3백만원)

[현장사례] 철도 통신장비 등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전파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을 이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표준규격 등 자체 규정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공인기관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하여서, 과도한 시험 비용이 중복 발생

- (개선) 기업 및 자재별로 최초 1회 공인기관시험을 통과\*한 경우, 추가적인 공인기관시험 없이 자재 현장 반입 허용

\* 시험통과 결과를 누리집에 등록하고 철도공단이 관련내용을 조회·확인하여 처리 → 1백여개 업체 연 3억원 비용경감 예상 및 납품기간 단축(0.5개월)

## 4.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 ① 공공기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기간 단축 (주)공영홈쇼핑 등 2개 기관

- (현황) 공영홈쇼핑은 판매이후 배송완료 기준, 매 10일 단위(월3회) 정산마감 → 정산마감일 + 10일에 대금 지급(10-10 결제제도)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매대금 정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업은 판매금 정산기간 단축을 희망

[현장사례] 공영홈쇼핑을 통해 지역 특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A사는 최근 방송에서 제품이 매진되는 큰 성과를 거뒀으나, 배송까지 완료하였음에도 실제 판매대금이 들어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생산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애로점이 발생

- (개선) 입점기업이 정산마감일 + 2일 이후 자유롭게 대금을 수취토록 대금지급 방식 개선(기본 지급수단을 '유통망 상생결제'로 변경)

### ② 향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출자지분 변경 사전승인제 개선 부산향만공사

- (현황)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이 출자지분을 5% 이상 변경할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하여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행정부담 증대

\* 소액 출자자 변경, 소액 자사주 소각 등 출자지분 5% 변경은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나 민간 투자 유치와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

[현장사례] 향만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 A사는 물류센터 증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소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약 6%의 출자지분 변동이 발생하여 출자지분 변경 사전 승인이 필요 → 승인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금 납입 일정이 수주간 보류됨

- (개선)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시, 사전승인 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편의 및 자율성 제고

### ③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서류제출 간소화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

- (현황) 혁신바우처 지원 관련 수혜기업은 7종, 제공기업은 10종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제출에 따른 부담 상당

\* 채무불이행 확인서(약 2만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약 30만원) 등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기업이 개별 발급 후 스캔본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

**[현장사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A사는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7종의 필수 서류를 개별 외부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지출 → 별도 행정전담 인력이 없는 사항에서도 각기 다른 기관을 돌며 서류를 구비하고 스캔·업로드하는 등을 하며 수일을 소요

- **(개선) 원클릭 서류제출 플랫폼\*** 및 기업정보 연동(API)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개별 서류제출 없이 기관에서 일괄 처리\*\*
  - \*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를 한 번에 직접 발급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 전송시스템
  - \*\* 대상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규제개선으로 연간 약 7천만원 비용절감

**4 혁신·성장기업 특례지원제도 의결요건 합리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개 기관

- **(현황) 특례지원제도\***를 통해 기업들에게 금융지원 중이나, **의결요건이 엄격\*\***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 \* 재무상태, 수출실적 등에 기반한 전통적 심사로는 지원이 어려우나, 기술력·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 등을 특별지원하는 제도
  - \*\* 전원 외부전문가(금융계·학계·법조계 등)로 구성된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5인 출석 및 4인 이상 찬성시 가결
- **(개선) 금액별 차등에 따른 의결요건 합리화\*** 및 **서면의결 활성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신속한 금융지원 기반 마련
  - \* 예시) 50억원 이하 사업 : 3인 출석, 2인 이상 찬성시 가결

**5 임산물 프리미엄 브랜드 지정절차 개선** 한국임업진흥원

- **(현황) 임산물 프리미엄 브랜드 지정\*시 제출서류가 과다하고 현장평가 항목이 많아** 신청기업 부담 상당
  - \*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검토(서류심사) → 현장평가(역량·품질) → 잔류농약 검사 → 브랜드 운영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현장사례]** 고품질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지역 영농조합법인 A사는 자사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판로 확대를 위해 ‘임산물 프리미엄 브랜드’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신청 단계에서부터 요구되는 방대한 증빙 서류, 까다로운 현장평가 대응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애로를 겪음

- **(개선) 신청자 편의를 위해 필수 제출서류 최소화(10종 이상→4종)** 및 **실질적 평가항목 중심으로 현장평가 간소화(45종→최대 16종)**

## IV. 향후 추진계획

### □ 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숨은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

- 개선과제 이행점검 및 모범사례 확산
  - 금번 개선과제에 대해서 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
  -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26.하)하고, 우수 개선사례는 타 기관에 확산·전파
-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중 부처·지자체 소관규제는 중기 음부즈만 추가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개선협의 및 규제 합리화 지속 실시
  - 또한 기업규제 관련 공공기관 주요 규정 공개방안 검토\*
  - \* 아울러 필요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활용하여 자체 조달기준 등 필요정보를 기업이 선별·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규제정보 제공시스템 도입 여부도 검토

### □ 공공기관 규제 소통창구 확대 및 사후 컨설팅 제공

-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 확대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현행 144개 기관에서 153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일부기관은 본부 중심에서 지역 단위까지 확대\*\*
  -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송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추가 설치
  - \*\* KOICA는 전국 10개 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에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규제애로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19개 기관)
- 인증·심사·평가 등 탈락기업에 대해 기관 피드백 제공 확대
  - 탈락업체에 대해 탈락 원인분석, 보완 필요사항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 확대\*\*
  - \* 예) 카카오채널로 기자재 유자격 신청접수를 받고, 합격여부 뿐만 아니라 탈락업체에 대해 탈락원인 분석 및 보완 필요사항 안내(남부발전)
  - \*\*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0개 기관에서 도입 예정

**붙임**

**숨은규제 합리화 세부내용**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b>1.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44건)</b>			
1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입지기준 완화	<p><b>현행</b> 액화수소 충전시설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일반 충전시설보다 넓은 사업부지*를 요구하여 부지 확보에 애로가 상당                      * 액화수소 방출가스는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확산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 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 중                      - 또한 버스 차고지는 차고지 경계를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인정 받아 부지 확보가 용이하나, 화물차 차고지는 예외 미인정</p> <p><b>개선</b> ①방출구 위치 제한규제를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하고 ②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도 완화(기후부)하여 설치부담 경감                      * ①액화수소도 기체 형태로 방출됨으로 기체수소와 다른 규제를 적용할 근거 없음                      ②버스 차고지 이외 화물차 등 상용차 차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소 경계규제 완화                      ** 조치사항 : 액화수소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추가 안전 기준 및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p>	한국가스 안전공사 ('26.12월)
2-7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 기회 확대	<p><b>현행</b> 발전 기자재 부품 공급업체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이력'에 감점**을 최대 5년간 부여하여 재도전 기업의 진입부담 상당                      * 발전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 선정제도 : 특정 공급자(공급업체)가 특정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서류심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선정(유자격자 명부 등록 3년)                      ** '부도/화의' 기간에 따라 -5점(1년 미만)에서 -1점(3년 이상 5년미만)까지 감점 부여</p> <p><b>개선</b>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하여 원활한 재기회 마련 및 과도한 기업경영 부담 경감                      * 기업의 재정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등의 자료로 판단 가능                      ** 조치사항 : 발전5사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 통합관리지침 개정</p>	한국남부 발전 등 발전5사 ('25.7월)
<b>참여기관</b>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5.12월)			
8	고속도로변 주택사업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p><b>현행</b> 도로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나, 기존 태양광 발전 사업지 물량이 한정되고, 방음시설 활용도 제한*                      * 방음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방음판은 구매조건부(수의계약가능) 제품에 한해 적용 중</p> <p><b>개선</b> 방음시설*에 발전사가 태양광 발전 방음판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                      * 운영중인 고속도로 인근으로 주택사업 시행시 주택사업자 필요에 의해서 고속도로변에 설치를 요구하는 방음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주택사업자 부담)                      ** 조치사항 : 태양광 발전 방음판 설치 및 운영 기준 제정</p>	한국 도로공사 ('25.12월)
9	기재자공급 유자격자 등록 심사·관리 합리화	<p><b>현행</b> 등록 기술분야 심사시 ①비핵심 점검항목* 기준 미달에 대해 부적격 처리를 하고, 유자격자의 취소사유 발생시 ②사유 경중과 관계없이 2년간 재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기업부담                      * 작업장 청결도, 하도급 관리대장 운영 등</p> <p><b>개선</b> 핵심 점검항목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유자격 등록 취소사유별로 재등록 제한기한 차등 설정**하여 합리성 제고                      * 설계실적·능력·인력 적정성 등을 주로 평가하고 핵심 점검항목 기준점수 미달시 부적격                      ** 허위서류제출 등 중대사유는 2년, 시정조치 불이행 등 경미한 사유는 6월~1년 제한                      *** 조치사항 : 기자재공급자운영업무절차 개정</p>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 ('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10 - 11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개선	<p><b>현행</b> 온라인비디오물(OTT) 사업자로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항목** 중 '기업 현황' 항목에서 사업실적·수상내역 등을 평가해 가점 3점이 부여돼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p> <p>*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온라인비디오물(OTT) 사업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는 제도</p> <p>**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 1. 업종, 2. 기업현황(가점 3점), 3. 등급분류 책임자, 4. 영화비디오법 위반 이력</p> <p><b>개선</b> 온라인비디오물(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중 '기업현황' 항목에서 가점제(가점 3점) 폐지</p> <p>* 조치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지침 개정</p>	영상물 등급 위원회 ('25.6월)
		<b>참여기관</b> 게임물관리위원회('26.3월)	
12 - 16	발전설비 기자재공급자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합리화	<p><b>현행</b> 발전설비 기자재 공급자의 자격심사 및 등록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관리위원회를 운영하나, 발전사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되어 통제기능 미비 등 공정성 저하</p> <p><b>개선</b> 기자재공급자관리위원회 위원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진입 공정성 확보</p> <p>* 조치사항 : 발전5사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 통합관리지침 개정</p>	한국남부 발전 등 발전5사 ('25.7월)
17 - 21	발전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 신청서류 간소화	<p><b>현행</b> 발전 기자재 공급자는 납품실적 증명을 위해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행정처리 등에 시간이 과다 소요</p> <p><b>개선</b> 불필요한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해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에도 납품실적증명서와 동일하게 효력 인정</p> <p>* 조치사항 : 발전5사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 통합관리지침 개정</p>	한국남부 발전 등 발전5사 ('25.7월)
22 - 23	환경정책자금 용자 지원대상 확대	<p><b>현행</b> 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오염방지시설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산업단지관리공단(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되어 그 결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수혜 곤란</p> <p>*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오염방지시설을 산업단지관리공단(비영리법인)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어서, 용자금 지원의 사각지대</p> <p><b>개선</b>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비영리법인)'도 지원(탈황시설 등 29억원)하도록 대상 확대</p> <p>* 조치사항 :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 개정</p>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25.6월)
		<b>참여기관</b> 중소기업은행('26.6월)	
24 - 25	콘텐츠 지원사업 자격요건 완화	<p><b>현행</b> 과도한 콘텐츠지원사업 동시 수행 규제, 지원요건 규제 등 자격요건*으로 인해 기업 애로사항 발생</p> <p>* 지원금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동시 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현재 5천만 원 이하 과제 수가 총 과제의 13%에 불과하여 현실화 필요</p> <p><b>개선</b> 보조사업 동시 수행 산정 제외 기준 금액 1억원으로 확대 등을 통한 자격요건 완화</p> <p>* 조치사항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개정</p>	한국 콘텐츠진흥원 ('25.8월)
		<b>참여기관</b> 영화진흥위원회('26.4월)	
26	방송광고 지원사업 신청자격 완화	<p><b>현행</b>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중이어서 신청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최근 1년 이내 케이블, IPTV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 발생</p> <p>*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p> <p><b>개선</b> 신청자격 제한요건 폐지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확대</p> <p>* 조치사항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개정</p>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 ('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27 - 28	인천공항 식음매장 작은기업 입점기회 확대	<p><b>현행</b>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업역량이 부족하고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기 어려워 시장 경쟁을 통해서도 공항 입점이 제한</p> <p><b>개선</b>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작은기업 입점기회 제공 및 역량 보완</p> <p>* 입찰공고 시 사업자가 낙찰받은 사업권 중 일부 매장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만 입점토록하고, 낮은 임대료(매출의 7%)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마련</p> <p>** 조치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전용매장 오픈</p>	인천국제 공항공사 (25.6월)
<p><b>참여기관</b>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26.6월)</p>			
29 - 30	품질관련등급 공급업체 등록 컨설팅 지원	<p><b>현행</b> 원자력환경공단에 품질관련등급(AQ) 품목을 조달할 때, 생소한 AQ 공급업체 평가·등록 의무 절차로 어려움 호소</p> <p>* AQ(Augmented-Quality class): 폐기물안전범주 I, II 및 내진범주 I, II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기기 등</p> <p><b>개선</b> AQ품목 등록희망업체 대상 홍보, 무료컨설팅 시행 및 관련 규정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AQ 조달에 기여</p> <p>* 조치사항 : 원자력환경공단 업체평가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p>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26.12월)
<p><b>참여기관</b> 한국수력원자력(26.12월)</p>			
31 - 32	관세조치 피해기업 지원요건 개선	<p><b>현행</b>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위기 대응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요건이 엄격</p> <p>* 관세조치 피해기업의 매출·고용 10% 이상 감소에 한정</p> <p><b>개선</b> 관세조치 피해기업의 매출·고용 감소요건 완화</p> <p>* 조치사항 : 신속위기대응 특례보증 운용기준 기준 개정</p>	신용보증 기금 (25.8월)
<p><b>참여기관</b> 한국수출입은행(26.2월)</p>			
33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입주심사 합리화	<p><b>현행</b>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신생기업의 경우, 입주 심사위원회의 입주심사(평균점수 60점 미만 입주 불가)를 받아야 하나, 일부 심사항목*이 중소·신생기업에게 불리하고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에 애로 호소</p> <p>* 매출규모, 수출실적, 자기자본비율, 연구개발비, 단지 근무인력 등</p> <p>** 3년간 재무제표, 고용계획서, 납세증명서, 각종(수출, R&amp;D 등) 실적증빙 등</p> <p><b>개선</b> 입주심사위원회 평가절차를 삭제하고, 입주업종, 자격 등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여 입주심사 서류제출 축소 및 기간 단축**</p> <p>* 입주 희망업체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입주기업 결정, 입주업종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운영</p> <p>** 선정기간 : 30일 → 16일, / 제출서류 : 19개 → 3개</p> <p>*** 조치사항 : 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 자체규정 개정</p>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25.8월)
34	중소 건설사 PF 특별보증 사업성 평가 강화	<p><b>현행</b> PF보증 심사시 시공능력평가순위를 심사하지 않으나, 실제 시공순위 100위 이내 중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보증 취급 중</p> <p>* '22년부터 '25.8월까지 PF보증이 발급된 125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의 시공자가 시공순위 100위 이내</p> <p><b>개선</b> 사업성이 높음에도 시공자의 시공순위가 낮아 PF 보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중소 건설사를 위해 심사기준 개선</p> <p>* 시공자의 시공순위가 100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PF보증 심사기준 대비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시공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완화한 특별 심사기준 우선 적용</p> <p>** 조치사항 : 주택사업금융보증 관련 규정 개정</p>	주택도시 보증공사 (25.9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35	산림복지전문업 공모사업 참여기회 확대	<b>현행</b> 산림복지전문업 공모선정에 청년 및 초기 전문업은 노하우 부족으로 시장진입 어려움 호소 <b>개선</b> 공모사업별 공모심사 기준 신설 및 개편을 통해 참여 확대 * 조치사항 :청년(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전문업) 및 초기 산림복지전문업 (3년 이내 사업자등록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전문업)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공모기준 가점 신설(3점)	한국 산림복지 진흥원 (25.10월)
36	철도부지 개발사업 민간참여 부담경감	<b>현행</b> 철도공단의 민간투자사업은 과도한 제안서 수준을 요구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 민간제안공모 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사업주관자 공모'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과도한 제안을 요구 <b>개선</b> 공모 제안서 간소화 및 개발 잠재력이 양호한 국유지를 민간이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상시공모'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 조치사항 : 민간제안공모 표준지침서 수립 및 상시공모 제도 운영	국가철도 공단 (25.8월)
37	지입자재 공급업체 선정기준 개선	<b>현행</b> 건설공사 기술표준에 의거 공사용역 원도급사가 지입자재 입찰 시 검사장비 보유 등 소상공인에 불리한 조항 상존 <b>개선</b> 지입자재 입찰 평가 개선(검사장비 보유 등 요건 삭제, 기자재 적합성 배점 상향)으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 조치사항 : 건설공사 기술표준 개정	한국가스 공사 (25.9월)
38	명저번역 사업 중소업체 참여 기회 확대	<b>현행</b> 출판시장 축소로 경쟁력 있는 중소 출판사의 전문성과 인문사회 분야의 위상이 약화 <b>개선</b> 인문사회 분야 명저번역 사업에 중소 출판사를 선정,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중소 출판사 발굴·지원 * 지정 출판사 지원 예산 확대 및 평가지표 개선(출판실적, 도서전 참여 실적 등 포함) 통해 중소 출판사 참여기회 확대 ** 조치사항 : 명저번역사업 관련 내부지침 개정	한국연구 재단 (25.7월)
39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요건 완화	<b>현행</b>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의 모집시기와 지원대상이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들의 시정 요구 지속 *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 해결을 위해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투자 촉진에 기여 ** 정해진 공고 기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수시 신청이 불가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2년차 신·증설 기업으로 한정 <b>개선</b> 상시모집 체계로 전환, 신·증설 기업 인정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지방 투자기업의 초기 인력애로를 실질적 해결 * 조치사항 :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모집공고 개정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25.7월)
40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요건 완화	<b>현행</b> 창업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하여 매출채권 보험 수요가 크지만, 신용등급 요건 등의 제한으로 보험 가입 제약 <b>개선</b> 창업기업에 대한 보험가입 요건 및 보험대상매출채권 추정 한도를 완화하고 보험인수비율과 보상률 상향 * 조치사항 :매출채권보험 인수업무기준, 정책 우대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 운용기준 개정	신용보증 기금 (25.8월)
41	해상풍력 전용 보증제도 신설	<b>현행</b> 해상풍력사업은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보증제도로는 지원 불가 * 기존 보증제도는 개별기업의 신용도 등을 담보한 기업금융(CF)방식이나, 해상풍력사업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담보한 PF방식으로 시중은행 투자 어려움 <b>개선</b> SOC사업을 보증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과 유사 구조로 해상풍력 전용 보증제도 신설 * 조치사항 : 해상풍력보증 전용 평가모형 개발 및 해상풍력보증 제규정 제정	신용보증 기금 (25.7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42 - 43	창업기업 보육공간 입주기간 확대	<p><b>현행</b>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보육공간인 상생협력센터 운영 중이나 별도 연장 절차가 없어 기업 성장 지원에 한계 * 입주기업은 최장 2년간 공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기간 만료 이후에는 별도 연장 절차 없이 퇴거절차 진행 중</p> <p><b>개선</b>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통상적인 제품 출시·상용화 기간인 3~5년 동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장 입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조치사항 : 상생협력센터 운영기준 개정</p> <p><b>참여기관</b>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6.4월)</p>	한국조폐공사 ('25.9월)
44	우체국쇼핑 특산물 입점부담 완화	<p><b>현행</b> 특산물 매장 입점심사는 1년에 2회 진행하고, 우체국쇼핑 내 타 매장 입점을 위해서는 별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필요</p> <p><b>개선</b> 특산물 매장 입점심사 확대(4회)하고, 특산물 모집 신청 서류 기반으로 타 매장 입점 심사 등 입점 희망업체 부담 경감 * 조치사항 : 우체국쇼핑 특산물 모집 관련 규정 개정</p>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6.3월)
<b>2.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b>			
1	물기업 시험·검사 수수료 경감대상 확대	<p><b>현행</b>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시 클러스터 입주기업등에 한해 수수료를 경감*, 연구개발 분석 감소** 및 기업간 차별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먹는물 분석 70%, 먹는물 이외 분석 50%, (공익목적 지원사업 선정기업) 면제, (물산업 기술발전 업무협약 단체) 30% ** 코로나19 특별감면제(무상) 종료('23.5월) 후 분석건수 대폭 감소('23년 8,319 → '24년 6,271건)</p> <p><b>개선</b> 수수료 감면적용 대상을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심에서 국내 물산업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감면)으로 확대 * 입주기업 이외 기업의 시험·검사건수 연간 3,800건(예상) → 53백만원 경감 추정 ** 조치사항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험·검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p>	한국환경공단 ('25.9월)
2 - 6	중소기업 AI 전환 비용지원 자체 시행	<p><b>현행</b> 중소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해 AI 전환 및 업무자동화가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AI 활용에 대한 지원 요청도 증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3%가 업무자동화 지원을 희망했으며, 이 중 45%는 AI 활용에 지원을 희망('25.8월)</p> <p><b>개선</b>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업무자동화, 비즈니스 생산성 개선 등 중소기업이 수요로 하는 인공지능 전환 소요비용 지원 * 민간자율 기획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한 인공지능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완료 후 소요비용 100% 환급(최소 3개사 이상 최대 5천만원 지원) ** 조치사항 : 중소기업 AX 지원사업 공고</p> <p><b>참여기관</b> 한국자활복지개발원('26.2월), 한국석유공사('26.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26.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26.12월)</p>	인천국제공항공사 ('26.12월)
7 - 12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확대	<p><b>현행</b>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 제도가 있으나 수수료 부담 등으로 제도 활용 미흡 *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p> <p><b>개선</b>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존 및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기술임치 수수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조치사항 : 중소기업 대상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사업 규정 개정</p> <p><b>참여기관</b> 국민건강보험공단('26.3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6.4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26.6월), 한국고용정보원('26.12월), 한국석유공사('26.12월)</p>	한국연구재단 ('25.12월)
13	실증기업 K-테스트베드 비용부담 감축	<p><b>현행</b> K-테스트베드 규정 상 '설치 관련 부대비용 전액 실증기업 부담' 조항이 있어, 실증을 원하는 기업들의 금전적인 부담* 가중 * 실증과정 중 공항 내 장소 제공 등 인프라 제공을 제외한 업체 기술/제품 설치, 철거 등 각종 부대비용은 기업에서 전액 부담</p> <p><b>개선</b> '중소기업 종합지원 제도' 내 기술 관련 테스트베드 지원 항목 신설 추진(1건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조치사항 : 중소기업 종합지원 제도 규정 개정</p>	인천국제공항공사 ('26.11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14	중소기업 직접투자형 공동 연구개발 제도 도입	<b>현행</b> 현재 운용되고 있는 R&D 지원사업*에서는 연구개발 후 공공 기관 구매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현재 정부 발주 R&D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니즈 충족이 어렵거나, 사업화 불확실성 존재 <b>개선</b>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를 구매로 연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직접 투자 및 공동연구과제 추진 제도 마련 * 조치사항 : 긴급 기술개발 필요과제 발굴 및 연계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추진, 공동연구(직접투자)에 대한 세부절차 및 표준협약서 마련 등	인천국제 공항공사 (‘26.6월)
15 - 16	글로벌 공동연구 법률검토 지원	<b>현행</b> 국내기업의 증가하는 해외 협력 기회에 반해, 법적 검토 및 협약의 절차 등에 대한 부담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어려움 호소 <b>개선</b> 해외 연구수행기관의 표준협약서 제시 및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지원하여 국내기업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도록 지원 * 조치사항 : 해외 연구수행기관의 권한과 책임, 연구성과 분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을 포함한 표준협약서 제정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25.7월)
<b>참여기관</b>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5.12월)			
17	상표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개발·보급	<b>현행</b> 상표 가치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평가 실무가이드 미비하고 가치평가 비용 지원도 미시행 <b>개선</b> 상표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개발 및 보급·확산하고 가치평가 비용 지원 시행 * 특허청에서 지정한 32개 기관 대상 실무가이드 보급 및 전문 교육 실시,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변경 공고	한국발명 진흥회 (‘26.3월)
18 - 19	녹색 정책자금 지원범위 확대	<b>현행</b>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 제시할 수 있거나 녹색기술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에게만 녹색 분야 수탁보증을 통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현장수요 반영에 한계 <b>개선</b> 녹색 분야 수탁보증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를 일반보증으로 확대 * 조치사항 : 일반보증에 녹색여성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도입	신용보증 기금 (‘26.12월)
<b>참여기관</b> 한국수출입은행(‘26.12월)			
20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b>현행</b>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가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건물고객 등이 불만 <b>개선</b>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지원사업 대상을 공동주택 외 건물까지 확대 * 조치사항 : ‘26년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지원사업 추진방안 수립시 반영	한국지역 난방공사 (‘26.2월)
21 - 23	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확대	<b>현행</b>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수혜대상이 대전·세종·충청권 기업으로 제한 <b>개선</b> 저금리 대출 지원대상을 전국 소재 중소협력사로 확대하여, 지역제한 규제 해소 및 정책금융 수혜기업 증대 * 조치사항 :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서 내용 개정	국가철도 공단 (‘26.5월)
<b>참여기관</b> 한국철도공사(‘25.12월), 한전KDN(‘25.12월)			
24	방송광고 패키지상품 중소기업 할인	<b>현행</b> 모든 기업에게 동일 조건으로 광고 단가와 패키지 가격을 기업규모 고려없이 적용중이어서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부담 <b>개선</b> 중소기업이 방송 광고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패키지별로 일괄적으로 0.5억 가격 인하 혜택 제공 * 조치사항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개정	한국 방송광고 진흥공사 (‘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25 - 27	협력사 성장 -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p><b>현행</b> 공단 협력사는 소상공인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하지만, 개별 기업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p> <p><b>개선</b> 매출액, 업력 등 단편적 지표 평가 대신 다차원적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성장단계별 협력사를 분류하고 협력사 성장단계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실질적 성장 지원 * 전략적 성숙도(성장단계), 기술-품질 경쟁력(핵심역량), 글로벌 확장성(시장 지향성), 생태계 기여도(전략적 부합도) 등 ** 조치사항 : 협력사 평가 관련 규정 개정</p> <p><b>참여기관</b> 한국석유공사('26.12월), 한전KDN('26.12월)</p>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26.12월)
28	환경표지 인증 등 취득부담 경감	<p><b>현행</b>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인 중소기업은 환경표지 인증 취득부담을 지속 호소(시험분석 수수료, 정보부족, 다수인증 취득비용)</p> <p><b>개선</b> 환경표지 미인증 기업에 대한 사전테스트 비용 90% 감면 및 생활화학제품·환경표지 동시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 조치사항 : 시험분석 신청 관련 업무규정 제정</p>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26.2월)
29	중소기업 특허 취득비용 지원요건 현실화	<p><b>현행</b> 중소기업에 특허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허청의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특허취득 달성이 어려움 * 지원통보 후 1년 이내 특허가 대상이나 통상 특허청 심사 1년이상 소요</p> <p><b>개선</b> 특허 취득 전 특허 출원 완료상태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 조치사항 : 기술개발 촉진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p>	한국지역 난방공사 (25.8월)
30	공동R&D기관 평가기준 합리화	<p><b>현행</b> 공동R&amp;D기관 평가항목 중 '연구개발 전담조직 운영'이 있고, 공동연구기관 협약 체결 후 별도 연구비 통장 개설이 의무로 소기업 참여 애로</p> <p><b>개선</b> 전담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소기업, 인증전문기관 및 학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통장 개설 뿐만 아니라, 잔액이 0원인 통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조치사항 :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 개정</p>	한국철도 공사 (25.8월)
31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데이터 취득장치 개발부담 경감	<p><b>현행</b> 재생에너지발전소는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가 의무지만, 기술규격서의 불명확성*, 검증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관련 기술 개발 난항 * 기술 규격간의 연계 사항과 해당 규격이 국제 표준 데이터 전송 규격 (MQTT)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음</p> <p><b>개선</b> 기술규격 완화 및 기관 자체 검토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개발 속도 개선 및 개발사 추가발굴을 통한 품질 향상 도모 * 불필요한 규격 삭제 및 보안 규격 완화를 하고 데이터 연계 시험 환경 무상제공 등 ** 조치사항 : 데이터 전송(MQTT) 가이드와 신규 개발사 설정 가이드 개정</p>	한국 전력거래소 (25.7월)
32	정비사업자금 보증부 대출 상환대상 범위 확대	<p><b>현행</b>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승인 이후 보증부대출을 활용한 상환 대상이 시공사·신탁사 대여금, PF대출금으로만 제한되고, 고금리인 브릿지대출은 상환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금리 비용 부담 증가</p> <p><b>개선</b>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부대출의 상환 대상 범위에 브릿지대출도 포함하고, 착공 전에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조달 부담 완화 지원 * 조치사항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시행세칙 개정</p>	주택도시 보증공사 (25.10월)
33	해외산림청년인재 지원대상 확대	<p><b>현행</b> 자격요건 제한에 의한 해외산림청년인재(인턴)사업의 지원 저조 * 프로그램 지원 자격요건을 졸업(예정)자로 한정</p> <p><b>개선</b> 산림·조경분야 대학생 대상 해외근무지 체험(인턴) 프로그램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지원 확대 유도 * 조치사항 :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운영 지침 개선</p>	한국임업 진흥원 (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34 - 35	원자력 신기술 규제 선제적 발굴 추진	<p><b>현행</b> AI 등 신기술 관련 규제체계 미비로 차세대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 등이 어려움</p> <p><b>개선</b> 관계부처,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학연 대상 '규제연구제안서' 수요조사 추진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 * 원자력관련 사업자·연구자 규제연구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 조치사항 : '규제연구제안서' 수요조사,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실시</p>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25.10월)
<p><b>참여기관</b> 한국로봇산업진흥원('26.12월)</p>			
36	기술사업화 지원대상 확대	<p><b>현행</b> 원활한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출원 단계부터 금융지원이 필요하나 출원 이후 특허등록 전까지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움</p> <p><b>개선</b> 지식재산(IP) 창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출원특허를 기술가치평가(IP-가치평가) 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조치사항 : 기술가치평가 운용기준, 지식재산 보증 운용기준 개정</p>	신용보증 기금 (25.8월)
37 - 38	AI 등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 분야 확대	<p><b>현행</b>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의 제출서류가 과다하고, 공모 분야도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기검증된 우수기술임에도 동일한 심의절차를 적용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 가중</p> <p><b>개선</b> 신기술 공모(대상)분야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 AI 기술분야 등에 대해 공모를 확대하고, 기술적 검토서류(신기술 설명서 등) 필수항목 외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타 제출서류는 간소화, 인증만료 신기술 공모 재접수 시 2차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기 검증된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1,2차 심의를 면제 ** 조치사항 : LH 신기술 업무처리지침 개정</p>	한국토지 주택공사 (25.10월)
<p><b>참여기관</b>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6.12월)</p>			
39	공동 연구개발과제 개발선정품 절차 간소화	<p><b>현행</b> 철도연구원과 자체 R&amp;D 과제 연구 완료 후 협력기업은 별도로 재무경영실에 개발선정품 지정 요청 절차 진행이 필요해 행정부담 야기 *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하여 공동 연구개발시 제출된 서류를 개발 선정품 지정 요청 시 재첨부 필요</p> <p><b>개선</b> 철도연구원 공동 R&amp;D 개발품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선정품 지정시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 등 각종 증빙서류 생략을 통해 협력기업의 부담 완화 * 조치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운영 절차 개선</p>	한국철도 공사 (26.6월)
<p><b>3.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123건)</b></p>			
1 - 7	중소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지원	<p><b>현행</b>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경험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약정체결 업무에 어려움 호소</p> <p><b>개선</b> 기체결 계약 중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미도입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신규 대상업체 발굴·지원 * 조치사항 : 한국연구재단 내규 개정</p>	한국연구 재단 (25.10월)
<p><b>참여기관</b> 국민건강보험공단('26.3월), 한전MCS('26.6월), 주식회사 에스알('26.12월), 한국철도공사('26.12월), 한국도로교통공단('26.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26.12월)</p>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8 - 13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 인하	<p><b>현행</b> 물품 제조·구매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3%)보다 높은 5%로 규정하여 기업부담 야기 및 형평성 애로 * 국가계약법령은 관련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자체운용</p> <p><b>개선</b> 조달청 기준과 같이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인하(연간 21억원 비용절감 예산) * 조치사항 : 계약업무관리지침 개정</p> <p><b>참여기관</b> 국악방송('26.3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26.4월), 강원랜드('26.6월), 재외동포협력센터('26.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26.12월)</p>	한국가스공사 (25.9월)
14 - 15	급식위탁용역 계약방식 합리화	<p><b>현행</b> 급식위탁용역 특성상* 발주기관의 수요 변동에 따라 수탁업체가 원재료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추가비용 부담 빈번 * 실 수요에 따른 비용 정산 방식의 용역계약(세부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계약으로 정함)으로 식수 변경, 수량 조정 관련 조건이 위탁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p> <p><b>개선</b> '실 수요 수량 사전통지'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확히 반영* 시키고 급식 수탁업체에게 각종 부대경비 전가를 방지** * 또한 급식 식수량 사전통지를 위하여 수탁업체-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 실시 ** 급식수탁업체의 시설 사용료(주방, 식당 임대료 등) 및 운영 경비(상하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비용 부담은 위탁자(공공기관)가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조치사항 : 급식 발주시스템 및 급식위탁운영 계약조건 개선 완료</p> <p><b>참여기관</b> 한국지역난방공사('26.12월)</p>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12월)
16 - 25	조달입찰 인지세 납부부담 완화	<p><b>현행</b> 인지세를 공동납부를 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약업체가 인지세를 전액 납부</p> <p><b>개선</b> 기업이 전액부담하던 인지세를 기관과 공동납부(5:5)하고, 공동납부하던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 전액 납부로 기업 부담 완화 * 조치사항: 계약업무 개선 수립</p> <p><b>참여기관</b> 국악방송('26.3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26.3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6.4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26.4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6.6월), 한전MCS('26.6월), 국가유산진흥원('26.6월), 정부법무공단('26.6월), 주택관리공단('26.12월)</p>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5.11월)
26 - 31	조달입찰 인지세 납부부담 면제	<p><b>현행</b>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2~35만원)를 공단과 중소기업이 각 50%로 부담</p> <p><b>개선</b>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인지세를 공단이 부담하여 중소기업들의 부담 경감 * 조치사항 : 예산추출화 사업을 통한 인지세 대금 확보 및 관련 예산 배정 및 실시</p> <p><b>참여기관</b> 영화진흥위원회('26.3월), 건설근로자공제회('26.6월), 에너지경제연구원('26.6월), 우체국물류지원단('26.6월), 한국산업인력공단('26.12월)</p>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6.3월)
32	조달기업 대금 청구절차 간소화	<p><b>현행</b> 기관 전자조달시스템 대금 청구시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자료 첨부 등 절차가 번거로워 행정불편 과다 * 공단 자체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시스템</p> <p><b>개선</b>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목록을 자동으로 불러온 후(스크래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대금 청구서에 반영** *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 연 6천여건 계약 대금 청구서 작성 시 약 2,750시간 절감(1건당 5분 소요 가정) *** 공단 회계규정 시행세칙 개정</p>	국가철도공단 (26.12월)
33	연구용역 제안서평가 실적 인정범위 확대	<p><b>현행</b>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시 '철도 관련 기술 분야'로 한정하여 경력·실적을 인정 → 기존 참여기업 이외 기업은 현실적으로 조달진입 애로</p> <p><b>개선</b> 철도 분야 이외 도로, 항만, 공항 등 유사분야의 조사·분석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용역 실적 등도 실적에 포함 * 조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개정</p>	국가철도공단 (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34 - 39	제작 영상산출물 납품방식 개선	<b>현행</b> 영상물 제작의뢰시 최종 산출물을 외장하드(백업용 포함) 등 비전자 저장매체로 납품토록 하여 기업 불편·부담* * 기업 담당자 행정부담 증대, 산출물 수정·보완시 추가 비용·불편 가중 등 <b>개선</b> 영상콘텐츠 등 최종 산출물을 클라우드 시스템 또는 전자 문서 시스템(이메일)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조치사항 : 내부 업무 개선	한국 발명진흥회 (26.2월)
		<b>참여기관</b> 국가유산진흥원(26.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6.12월), 세종학당 재단(26.12월), 재외동포협력센터(26.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26.12월)	
40	방송통신기자재 등 공사현장 반입절차 간소화	<b>현행</b>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관련 기기에 대해 공사·자재별로 공인기관시험을 받도록 하여 잦은 시험 및 비용 과다 등 애로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 건당 시험 비용(3백만원) <b>개선</b> 기업 및 자재별로 최초 1회 공인기관시험을 통과*한 경우, 추가적인 공인기관시험 없이 자재 현장 반입 허용 * 시험통과 결과를 누리집에 등록하고 철도공단이 관련내용을 조회·확인하여 처리→ 1백여개 업체 연 3억원 비용경감 예상 및 납품기간 단축(0.5개월)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등 관련 규격 및 업무프로세스 개정	국가철도 공단 (26.12월)
41 - 43	중소기업 입찰보증금 감면	<b>현행</b> 업체 계약이행능력 판단의 사유로 입찰보증금을 예외없이 5% 부과하여, 법령상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가능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미납하여 부적격 업체 발생 <b>개선</b> 입찰보증금 0%(면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 일부 부과(~1.5%)하여 최소한의 계약이행능력 판단 * 조치사항 : 입찰 공고 시 법적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업체는 0~1.5% 입찰보증금 완화하는 등 기준 마련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 (26.12월)
		<b>참여기관</b> 재외동포협력센터(26.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26.12월)	
44	경쟁입찰 제안평가 온라인 시스템 시범 도입	<b>현행</b> 경쟁입찰은 KOTRA 자체 제안평가회가 수기로 시행되어 제안업체는 미납찰시 영업비용 회수가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중 * 각종 행정작업(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등 심사용 서류, 협력사·평가위원용 약약·서약서 등 인쇄·편철, 수거·파쇄 등) 수기 처리 <b>개선</b> 조달청 나라장터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낙찰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력사의 행정력 및 예산절감 지원 * 조치사항 : 사업별 평가시스템 전면 의무화 검토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 (26.12월)
45 - 50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의무 폐지	<b>현행</b>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사전 사업 설명회 참석을 의무화하고, 불참시 본 입찰에 참여가 불가하여 기업 활동 제한 <b>개선</b> '계약사무 관리지침(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참석의무 여부에 따른 입찰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개정 추진 * 조치사항 : 계약사무 관리지침 개정	게임물관리 위원회 (26.6월)
		<b>참여기관</b> 에너지경제연구원(26.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6.6월),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26.6월), 한국부동산원(26.6월), 한국광해광업공단(26.12월)	
51 - 62	제안서평가시 사업책임자 발표 의무 개선	<b>현행</b>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 발표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한 경우 사유, 제안서 내용 및 기업 역량과 무관하게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되어 기업애로 <b>개선</b> 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요청에 따라 책임자(대표)로 PM 변경 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치사항 : 계약업무요령 관련 규정 개정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26.6월)
		<b>참여기관</b> 국악방송(26.3월), 영화진흥위원회(26.3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26.6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6.6월), 국립광주과학관(26.6월), 한국가스안전공사(26.6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26.12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6.12월), 세종학당재단(26.12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26.12월), 한국사학진흥재단(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63 - 80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p><b>현행</b>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의 미비로 중복 서류 제출 요청 등이 빈번하고, 형식적 절차가 과다하여 기업들의 부담 가중</p> <p><b>개선</b>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계약 제출서류 통합 및 형식적 운영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계약 체결 * 조치사항 :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 및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신설</p> <p><b>참여기관</b>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26.1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26.1월), 강원랜드(26.3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26.5월), 한국기상산업기술원(26.5월), 한국학중앙연구원(26.6월), 우체국물류지원단(26.6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6.6월), 국립광주과학관(26.6월), 한국부동산원(26.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6.6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6.6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26.12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26.12월), 주택관리공단(26.12월), 한국사학진흥재단(26.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27.1월)</p>	공무원 연금공단 (26.12월)
81 - 84	공사-용역 계약업무 도우미 시스템 구축	<p><b>현행</b> 공사의 복잡한 계약절차로 협력기업에 애로사항 다수 발생 * 계약 절차별 산재된 관련 법령·기준 등으로 계약 진행 어려움</p> <p><b>개선</b> 공사 홈페이지에 계약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절차별 통합메뉴얼을 제작하여 계약 절차별로 산재된 관련 법령·기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공 * 조치사항 : 공사 홈페이지에 통합메뉴얼 관리 메뉴 신설</p> <p><b>참여기관</b> 에너지경제연구원(26.6월), 국가유산진흥원(26.6월), 한국남부발전(26.12월)</p>	한국철도 공사 (25.12월)
85	해외물류 운송사 입찰평가기준 합리화	<p><b>현행</b> KOTRA 지원 해외전시회 한국관 물류 운송사 선정을 위한 현행 입찰평가제는 가격평가 비중*이 높아 전시물품 운송능력이 낮은 덤핑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우수한 운송사 선정 애로 * 기술능력평가 40%, 가격평가 60%</p> <p><b>개선</b> 한국관 물류 운송사 입찰평가 기준 구체화 및 평가배점 조정 *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조정, 기술능력평가를 정성평가(20점), 정량평가(이행실적, 경영상태, 운송 만족도, 신인도 등 60점) ** 조치사항 : KOTRA '해외전시회 지원 지침' 개정</p>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 (26.2월)
86	발주 전 물가변동 산정방식 합리화	<p><b>현행</b> 공사예산이 발주 전 물가변동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지속 유찰 발생</p> <p><b>개선</b> 지수조정률을 적용한 산정방식 도입으로 적정 공사비 책정 * 조치사항 : 기술형입찰(T/K) 사업에 도입</p>	국가철도 공단 (26.12월)
87	장기계속 사업 추가(변경) 계약 심사불편 경감	<p><b>현행</b> 장기계속 사업에서 추가(변경) 계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심사 기준 및 기본 양식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서류 보완 및 사업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등 행정절차에 시간소요, 불편 발생</p> <p><b>개선</b> 장기계속 사업에서 추가(변경) 계약 필요시, 심사기준 및 기본 양식 표준화,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심사기간 장기화 예방 * 조치사항 : 조달청 담당자 정보와 진행 상황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시간 피드백 실시</p>	서민금융 진흥원 (26.6월)
88 - 96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여 불편 완화	<p><b>현행</b>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업체는 제안서 인쇄물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해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소요 * 전쟁기념관은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시·교육·시설개선 등 긴급 공고 다수 발생하는데 조달청 공고기간이 15일로서 단기간에 제안서 작성 외 인쇄 및 직접 방문·제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 호소</p> <p><b>개선</b> 사업 입찰시 관련서류 전자방식 접수로 전면 전환 * 전쟁기념사업회 낸 각 부서에 입찰방식 간소화(전자방식 전환) 권고(단, 전시 관련 도면, 건축 관련 대면 설명 등의 소요가 있는 일부 사업을 제외)</p> <p><b>참여기관</b> 한국가스안전공사(26.6월), 한국부동산원(26.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6.6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6.6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6.12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26.12월), 세종학당재단(26.12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26.12월)</p>	전쟁기념 사업회 (26.5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97 - 98	화공약품계약 - 입찰서류 준비기간 합리화	<p><b>현행</b> 화공약품계약 시 입찰 공고일로부터 서류 제출기간까지의 기한이 촉박해 소규모 업체는 입찰 참여 불리 * 입찰공고기간은 7일이나, 필수 서류인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은 최대 2주 까지 소요되어 이를 주기적으로 발급받지 않는 경우 참여 어려움</p> <p><b>개선</b>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화공약품계약의 서류 제출 기간을 확대(3주)하여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조치사항 : 화공약품 계약입찰공고시 관련 내용 반영</p>	한국지역 난방공사 (26.12월)
<p><b>참여기관</b>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6.6월)</p>			
99	인쇄물 제작업 상시 조달등록 허용	<p><b>현행</b> 연 1회 입찰공고에 따라 인쇄물 출입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인쇄 업무 추진이 가능 하여, 계약기간 내에서 다음 공고·등록시까지 추가 등록이 불가</p> <p><b>개선</b> 계약기간 내 추가 등록을 원하는 업체가 입찰 공고시 제시한 기준(등록자격 및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업체로 추가하여 남은 계약기간까지 활동 허용 * 조치사항 : 내부 품의결재 및 누리집 공지</p>	한국 산업기술 기획평가원 (26.2월)
100	조경공사 입찰참가자격 합리화	<p><b>현행</b>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 토목·건축공사 중심이어서 조경공사는 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p> <p><b>개선</b> 조경공사에 대해 별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다수 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 * 조치사항 : K-water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p>	한국 수자원 공사 (25.12월)
101	국내업체 응찰 국제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개선	<p><b>현행</b> 국제입찰 관련 계약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항목이 없어 대기업과의 경쟁시 불리</p> <p><b>개선</b> 국내기업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한정하여 타 적격심사와 동일하게 중소·약자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반영 * 조치사항 :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개정</p>	한국철도 공사 (25.12월)
102	건설공사용 지입자재 공급업체 평가 체계 개선	<p><b>현행</b> 공사의 건설현장 지입자재 공급업체 평가기준이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 평가기준 대비 불합리 * 국가계약법 및 내부지침 보다 높은 실적 평가기준, 창업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납품실적 평가기준 부재 등</p> <p><b>개선</b> 평가방법 개선 및 합리화를 통한 효과적 평가기준 정립 *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평가 기준 신설, 분쟁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평가항목 삭제, 실적제한 완화(기준수량 50% → 10%) 등 ** 조치사항 : 건설공사 기술표준 개정</p>	한국가스 공사 (25.11월)
103 - 105	건설엔지니어링 PQ심사 서류제출 부담 경감	<p><b>현행</b>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평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 기업 부담</p> <p><b>개선</b> PQ 평가용 제출서류의 사후 제출로 입찰 참여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 조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기준 개정</p>	국가철도 공단 (25.12월)
<p><b>참여기관</b>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6.12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26.12월)</p>			
106 - 114	입찰참가자격 - 사전심사 서류제출 간소화	<p><b>현행</b>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인쇄본을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만 인정하여 기업들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중</p> <p><b>개선</b>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 방법을 전자 접수(나라장터)로 개선하여 기업 부담 완화 * 조치사항 : 입찰공고서 개선</p>	해양환경 공단 (26.6월)
<p><b>참여기관</b>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26.3월), 정부법무공단(26.6월), 한국가스안전공사(26.6월), 한국부동산원(26.6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6.6월), 한전 KDN(26.12월), 한국사학진흥재단(26.12월), 한국광해광업공단(26.12월)</p>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115 - 119	조달계약 전산화 및 프로세스 개선	<b>현행</b> 불필요한 행정처리 절차, 중복 업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시간과 인력 낭비 및 기업의 대응 속도 저하 * 종이문서 등 행정비용 부담 및 행정 대응에 따른 기업의 간접비 상승 <b>개선</b> 계약문서 표준화 및 전자문서화 시행, 계약 업무절차 간소화 * 조치사항 : 내부 계약 절차 개정	아시아문화 전당재단 (‘25.6월)
		<b>참여기관</b> 경제인문사회연구회(‘26.1월), 한식진흥원(‘26.1월), 우체국물류지원단(‘26.7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6.12월)	
120 - 122	조달계약 검수 절차 간소화	<b>현행</b> 진료재료 등 물품 입고 시 서면 검수 조서 작성 및 도장 날인 등 아날로그식 검수 절차로 인하여 납품 업체들의 서류 증가, 대금정산 지연 등 불필요한 행정지원 부담 증가 <b>개선</b> 전산시스템 개발 등 검수 업무 처리 방식 디지털 전환으로 업체 불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부담 경감 * 조치사항 : ① 디지털 기반 병원정보시스템(HIS) 고도화(~’27.3월) ② 공단 물품관리시행세칙 개정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 (‘27.3월)
		<b>참여기관</b>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6.6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6.12월)	
123	열거래 가이드라인 대외공개	<b>현행</b> 열거래 계약체결 관련 기준이 없이, 사안별·사업자별 협의를 해야 해 협상력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한 구조 <b>개선</b> 외부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열거래가격 산정방식 등 기준을 대외공개하여 열거래 표준 제시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 협상력 제고 * 조치사항 : 열거래 가이드라인 수립 및 대외 공개	한국지역 난방공사 (‘25.10월)
<b>4.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합리화 (45건)</b>			
1 - 2	공공기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기간 단축	<b>현행</b> 공영홈쇼핑은 판매이후 배송완료 기준, 매 10일 단위(월3회) 정산마감 → 정산마감일 + 10일에 대금 지급(10-10 결제제도) <b>개선</b> 공영홈쇼핑 기본 지급수단을 “유통망 상생결제”로 변경하여 협력사는 정산마감일+2일 이후 자유롭게 정산대금 수취 * 조치사항 :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 확대	(주) 공영홈쇼핑 (‘25.12월)
		<b>참여기관</b> 한국철도공사(‘26.12월)	
3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출자지분 변경 사전승인제 개선	<b>현행</b>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출자지분을 5% 이상 변경할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하여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행정부담 증대 * 소액 출자자 변경, 소액 자사주 소각 등 출자지분 5% 변경은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어려우나 민간 투자 유치와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 <b>개선</b>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사전승인 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업편의 및 자율성 제고 * 조치사항 :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부산항만 공사 (‘26.12월)
4 - 9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서류제출 간소화	<b>현행</b> 혁신바우처 지원 관련 수혜기업은 7종, 제공기업은 10종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제출에 따른 부담 상당 * 채무불이행 확인서(약 2만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약 30만원) 등 외부 기관 발급 서류는 기업이 개별 발급 후 스캔본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 <b>개선</b> 원클릭 서류제출 플랫폼* 및 기업정보 연동(API)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개별 서류제출 없이 기관에서 일괄 처리** *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를 한 번에 직접 발급·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 전송시스템 ** 대상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규제개선으로 연간 약 7천만원 비용절감 *** 조치사항 : 원클릭 서류 제출 플랫폼 구축	한국관광 공사 (‘26.12월)
		<b>참여기관</b> 한국자활복지개발원(‘26.3월), 창업진흥원(‘26.6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6.12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26.12월), 주식회사 에스알(‘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10 - 11	혁신·성장기업 - 특례지원제도 의결요건 합리화	<p><b>현행</b> 특례지원제도를 통해 기업들에게 금융지원 중이나, 의결요건이 엄격**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p> <p>* 재무상태, 수출실적 등에 기반한 전통적 심사로 지원이 어려우나, 기술력·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 등을 특별지원하는 제도</p> <p>** 전원 외부전문가(금융계·학계·법조계 등)로 구성된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5인 출석 및 4인 이상 찬성시 가결</p> <p><b>개선</b> 금액별 차등에 따른 의결요건 합리화* 및 서면의결 활성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신속한 금융지원 기반 마련</p> <p>* 예시) 50억원 이하 사업 : 3인 출석, 2인 이상 찬성시 가결</p> <p>** 조치사항 : 특례지원제도 관련 의결요건 규정 개정</p>	한국 무역보험 공사 (26.3월)
		<b>참여기관</b>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6.6월)	
12	임산물 프리미엄 브랜드 지정절차 개선	<p><b>현행</b> 임산물 프리미엄 브랜드 지정*시 제출서류가 과다하고 현장 평가 항목이 많아 신청기업 부담 상당</p> <p>*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검토(서류심사) → 현장평가(역량·품질) → 잔류 농약 검사 → 브랜드 운영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p> <p><b>개선</b> 신청자 편의를 위해 필수 제출서류 최소화(10종 이상→4종) 및 실질적 평가항목 중심으로 현장평가 간소화(45종→최대 16종)</p> <p>* 조치사항 : 내부 규정 개선(25.7월) 및 홈페이지 개선(25.12월)</p>	한국 임업진흥원 (25.12월)
13	휴게소 맞춤형 음원 제작·공유	<p><b>현행</b> 공공장소에서 음악 방송시 음원 스트리밍료 및 저작권료가 발생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배경음악 사용 어려움</p> <p><b>개선</b>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휴게소 맞춤형 음악 제작</p> <p>* 조치사항 : 현재 전북 및 전남지역 56개 휴게소에 운영 중이며, 전국 211개 휴게소로 확대 시행</p>	한국도로 공사 (25.12월)
14 - 16	민간투자사업 컨설팅 지원강화	<p><b>현행</b> 사업 추진 경험이 부족한 중소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법률·재무 등 복잡한 검토사항으로 참여 제약</p> <p><b>개선</b> 민간투자사업 진행 단계별 컨설팅 종류 세분화 및 보고서 표준안 신설 등 체계 정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p> <p>* 조치사항 : 컨설팅 사업 신설 및 체계 정립</p>	신용보증 기금 (25.6월)
		<b>참여기관</b>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6.6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6.12월)	
17 - 18	규제샌드박스 - 신청서 작성 편의성 제고	<p><b>현행</b>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의사는 높지만 신청서 작성의 복잡성으로 산업융합 기업들의 참여 어려움 호소</p> <p><b>개선</b>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샘플을 분야별 확대 제공</p> <p>* 조치사항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제공 샘플을 4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 제공</p>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26.12월)
		<b>참여기관</b> 한국로봇산업진흥원(26.12월)	
19 - 20	공동투자 업체 현황정보 제공 확대	<p><b>현행</b>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 공동투자 업체 현황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동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업체의 불편초래</p> <p>* 업체가 JIS 운영기관(관리원)에 등록요청 후 관리원에서 직접 등록</p> <p><b>개선</b> 공동투자 업체가 직접 현황정보를 등록*하고 제공정보 확대 요청 시 추가 반영이 가능하도록 JIS 기능개선 지원</p> <p>* 공동투자를 실시하는 업체 누구나, 지체없이 직접 등록 가능</p> <p>** 조치사항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기능개선</p>	국토안전 관리원 (26.12월)
		<b>참여기관</b>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6.6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2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절차 개선	<b>현행</b>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검토 결과가 시스템(CSI)에 저장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검토결과 별도 제출 의무 <b>개선</b>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완료 시, 검토결과 데이터를 자동 등록하여 시공사·감리사의 검토결과 제출 선행 업무 삭제 * 조치사항 : 1·2종 신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절차 간소화 시스템(CSI) 기능 개선	국토안전 관리원 (25.12월)
22 - 23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시공사 대여금 증빙 간소화	<b>현행</b>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승인 심사 시 집행행 내역을 영수증 등 집행증빙을 통해 점검하여 시공사 행정부담 <b>개선</b> 심사 시 집행증빙을 점검하는 대신 회계감사 자료로 기 집행 증빙을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행정부담 완화 * 조치사항 :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지시 및 예규 등록	주택도시 보증공사 (25.7월)
<b>참여기관</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6.3월)			
24	예산업체 온라인 전산 서비스 신규 도입	<b>현행</b> 예산업체를 이용할 때 유선·이메일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신청·변경·취소 요청 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해 서비스 지연 <b>개선</b>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예산 신청·변경·취소 및 부가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 조치사항 : 입찰항 선박 예인선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개설	해양환경 공단 (25.12월)
25 - 27	방사선분야 모바일 전자민원 제출불편 경감	<b>현행</b> 모바일 환경에서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 간편인증 기반 민원신청이 불가능하여 불편 발생 * 재직 증빙서류·신고확인증 제출 시 PC와 오프라인 병행 등 <b>개선</b> 모바일 전용 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및 알림 서비스 연계 (모바일 웹·SMS 병행 안내) * 조치사항 :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26.12월)
<b>참여기관</b> 한국국토정보공사(26.12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26.12월)			
28	방산수출금융 전담 별도 계정 마련	<b>현행</b>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초장기·초저리 금융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지원에 한계 <b>개선</b> 무보기금 내 방산수출금융 전담 별도 계정(방산계정) 조성을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 * 조치사항 : 내부 금융지원 규정 개정	한국 무역보험 공사 (26.12월)
29 - 30	생성형 AI 기반 규제 신속확인 지원서비스 도입	<b>현행</b>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규제 신속확인제도*가 운영중이나, 신청을 위한 상담·컨설팅, 신청서류 작성 등 신청절차상 시간 소요로 신청기업은 신속성을 체감하기 어려움** * 기업이 신기술·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필요 시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으로 연계 ** 규제샌드박스 상담 297건(25.상), 규제 신속확인 신청은 연평균 40건(22~24년)이며 평균 처리기간은 약 36일 소요, 지원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기업과의 반복적 자료 보완·협의로 맞춤형 지원효율 저하 <b>개선</b> 생성형 AI 기반 규제 신속확인 지원서비스 도입 * 조치사항 : AI를 통해 규제적용 가능성, 소관부처, 선행 규제특례 사례 등을 즉시 답변(1차 분석·안내) 등 지원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 (26.12월)
<b>참여기관</b>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6.12월)			
31	수·위탁기업 성과공유제 운영 기준·방식 합리화	<b>현행</b>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상생발전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운영 중이나, 구체적 기준 미비로 기업의 수용도·활용도가 낮음 <b>개선</b> 성과공유제 과제 선정 및 평가 기준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 ① 협력기관의 성과 목표 설정,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절차 정비, ② 기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투명한 사전 공개 조항 신설 ** 조치사항 : 공단 성과공유제 운영지침 개정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 (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32	수분양자 분양토지 사용승낙 불편 개선	<b>현행</b> 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분양대금 50%이상을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 <b>개선</b>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외에 정기에금증서, 채권 등 실행가능한 담보물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잔여대금 전액을 담보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조치사항 : K-water 용지공급규정 개정	한국 수자원 공사 (25.9월)
33	PF 보증 심사시 현금흐름표 양식 표준화	<b>현행</b>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 심사 시 현금흐름표 작성 양식이 지사별·담당자별로 상이하여 신청 중소기업자 서류작성 불편·부담 초래 * 사업자가 매번 다른 현금흐름표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고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비용부담도 증가 <b>개선</b> PF 보증 심사 시 현금흐름표 양식을 표준화하여 작성부담·시간 경감 * 조치사항 : 공통 양식 마련 및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주택도시 보증공사 (25.10월)
3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체계 개선	<b>현행</b>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진행시 직접 방문 및 현장 자료 제출·검토·평가로 진행하여 기업측에서 평가 대응에 어려움 토로 <b>개선</b> 최신보안기술을 탑재하고 실적자료 제출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 재구축 * 조치사항 : 내부 업무 개선(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공정거래 조정원 (25.9월)
35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 공공성 평가항목 도입	<b>현행</b> 기존 해외 투자사업 의사결정 시 美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미반영하여 해외 투자 어려움 <b>개선</b> 수출기업의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업 검토시 공공성(동반성장) 항목 명시로 상생협력 및 수출 촉진사항 고려 * 조치사항 : 타당성조사 대상 실무회의 운영세칙 개정	한국남부 발전 (25.10월)
36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방식 합리화	<b>현행</b>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현장조사*가 전국단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되어 한정된 인력예산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한계로 신청기업 애로 * 토양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는 품질조사원이 직접 재배 예정지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수거 하는 방식으로 운영(최근 3년간 100% 합격률) <b>개선</b> 신청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감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처리기간 단축(40.2일→32.2일) * 조치사항 : 내부 규정 개선 및 조사키트 제공	한국 임업진흥원 (25.10월)
37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부담경감 추진	<b>현행</b> 국토안전관리원은 1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이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사업 전후 효과분석(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참여에 애로 호소 및 사업 활성화 저해 *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가능 <b>개선</b>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편의성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수 개발·제공을 통해 사업관계자의 사전 분석업무 간소화* 지원 * 건물단위 시뮬레이션 → 건축물 용도, 면적, 건물용도별 기술요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계수 활용 단순계산 ** 조치사항 : 온실가스 감축계수 개발 진행	국토안전 관리원 (26.12월)
38 - 39	승강기 안전작업 관련 부담 경감	<b>현행</b> 작업구역 유효높이(2.1m) 초과 시 승강기 지붕 안전 작업대 설치 의무 및 안전작업 매뉴얼 제출 의무 부담으로 자체 표준 매뉴얼을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매뉴얼 자체 제작 어려움 <b>개선</b> 유효높이 완화(2.1m→2.6m) 및 중소기업계 작업 매뉴얼 컨설팅 통해 중소기업들의 부담 경감 * 조치사항 : 작업 유효 높이 2.1m~2.6m 현장 안전점검 매뉴얼 개정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25.9월)
<b>참여기관</b>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6.12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40	건축물 해체 계획서 적정성 검토 지원	<b>현행</b>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적정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도의 복잡성으로 계획서 수립이 어렵고 반복적인 보완요청으로 허가 지연 발생 * '24년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최초 적정률 54% 수준 <b>개선</b> 지자체에 해체계획서 제출 전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TOOL 제공 * 조치사항 : 해체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 TOOL(장비편) 마련·배포	국토안전 관리원 (25.7월)
41	건축물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개발·공유	<b>현행</b>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기존 토목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지원 중이나, 중소기업이 점검진단하는 건축물 관련한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은 부재 <b>개선</b> 건축물 진단·점검 분야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추가 개발하여 공유하고 민간기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경영 기반조성 지원을 추진 * 조치사항 : 건축물 진단·점검 분야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개발	국토안전 관리원 (25.7월)
42	원자력사업자 집합교육 축소	<b>현행</b> 방사능방재법 상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교육대상인 방호 종사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소요 <b>개선</b> 교육 전문기관에서 제공되는 집합교육 외 주요 근무처 방문 교육을 제공하여 출장비 부담 경감 * 조치사항: 방문교육 확대 및 교육 담당자 워크숍 실시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25.11월)
43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업 서울마당 대관료 할인	<b>현행</b> '서울마당'을 공간대관하여 홍보·마케팅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높은 대관료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 제한 * 1일 250만원 수준 <b>개선</b>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관료를 최대 30% 할인할 수 있도록 적용 * 조치사항 : 서울마당 운영규정 개정	한국 방송광고 진흥공사 (25.6월)
44	아케이드 게임기 출장검토 비용 감면	<b>현행</b> 아케이드 게임물에 관한 출장검토 관련 감면이 가능하나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관련기업 인지 어려움 <b>개선</b>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25조를 개정하여 감면 관련 근거 명문화 * 조치사항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게임물관리 위원회 (25.9월)
45	개인기업 디지털 기한연장 시스템 구축 추진	<b>현행</b>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위해 신보 홈페이지를 수차례 접속하거나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기업들의 불편 발생 <b>개선</b> One-Stop 기한연장을 통하여 연장 프로세스 간소화 * 조치사항 : One-Stop 시스템 개설	신용보증 기금 (25.9월)